
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산업입지 관련 추진내용

2022. 7.

본 자료는 2022년 2분기 현재 산업입지 관련 현안 및 정책동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한국산업단지공단 파견관(☎ 02-3497-1956)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I. 새정부 경제정책방향

- (추진배경) 대내적으로 과도한 규제·정부개입과 경제·사회 체질 개선 지연에 따라 성장동력이 약화되고, 대외적으로 인플레이션 심화, 공급망 차질,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
⇒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, 당면한 민생 어려움이 겹쳐 위기에 직면
- (정책방향) 새정부는 경제운용 중심을 공공에서 민간·기업·시장으로 전환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(22.6.16)
- (정책기조) 자유·공정·혁신·연대의 4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'저성장 극복과 성장-복지 선순환'을 목표로 설정
⇒ 과감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을 통해 당면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더불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



붙임 : 새정부 4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

Ⅱ. 산업입지 관련 추진내용

새정부의 4대 경제정책 방향에 부응하여 민간주도·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입지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구체적 사업 및 사례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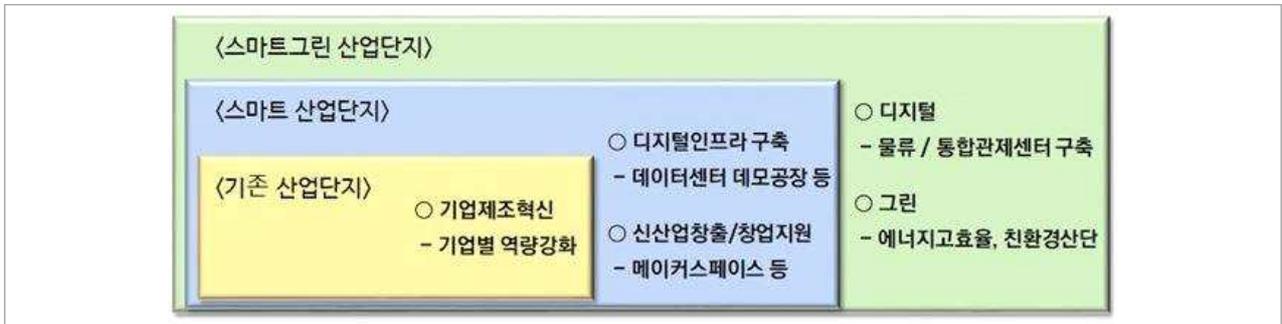
1 규제혁파 : 입지규제개선

□ (기본방향) 산업단지 내 업종제한 등 기존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하여 신산업성장 등 기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, 새로 도입되는 산업입지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하여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변혁의 추진동력 제공

□ (주요 개정내용)

| 법령 | 시행일 | 주요 개정내용 |
|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산업입지법 | '22.2.11 | ○ 민간사업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 법인(SPC)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 근거 마련 |
| 산업입지법 시행령 | '22.5.3 | ○ 민간사업자의 개발행위시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 산정에 기부채납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을 포함하여 부담 완화 ○ 실수요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력 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간 협업 촉진 |
| | '21.6.23 | ○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- 조성에 기여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○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양식사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양식시설을 추가(농공단지 한정) |
| 산업집적법 | '22.4.20 | ○ 산학융합지구 지정 가능 지역 확대(산업단지 → 대학 교지의 일정 지역, 기업도시, 혁신도시,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 추가) -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|
| | '21.9.16 | ○ 첨단투자지구 제도 도입 및 운영 근거 마련 - 정의 및 첨단투자지구의 지정·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-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(시설설치비용 지원, 보조금 지급, 세제지원,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, 신용보증 등) |
| | 규제개선 검토중 | ○ 계획업종 5년 경과시 업종규제 전면 완화 * 관리기관이 기반시설·환경영향 분석·협의 ○ 공장의 범위에 원료재생업 추가 ○ 공장 내 업종 융합 일부 허용 ○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 네거티브화 ○ 업종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* 국가산단 산업시설구역의 5% 또는 30만㎡ → 3% 또는 15만㎡ |

- (기본방향)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경제발전의 중추이자 주력 산업과 일자리 거점인 산업단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 따라, 산업단지 전략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을 모색
- (제도정의) 제조혁신의 기본단계인 개별기업의 스마트화와 발전 단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넘어, 심화단계인 디지털·그린이 융합된 혁신 산업단지



- (추진전략) 산업단지의 3대 구성요소인 산업·공간·사람의 혁신을 통해 디지털·그린·휴먼친화 전환을 추진

| | 산업 | 공간 | 사람 |
|------|--|--|---|
| | 전통산업 굴뚝산업 | 고탄소 저효율 오염 사고 | 정주여건 열악 청년층 기피 |
| | ↓ 디지털 | ↓ 그린+디지털 | ↓ 휴먼친화 |
| 목표 | 첨단·신산업 | 저탄소·고효율 친환경·안전 | 살기좋은 환경 청년인재 유입 |
| 추진과제 | 글로벌 선도 첨단산단 전환 | 저탄소·친환경 산단 혁신 | 청년 희망 키움 공간으로 탈바꿈 |
| | · 산업 밸류체인 전단계 디지털인프라 구축 · 산업 전주기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· 디지털인프라 통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| · (에너지) 저탄소·고효율의 에너지혁신 선도기지 구축 · (환경) 특화된 자원순환·친환경 청정산단 구현 · (안전) 통합안전관제시스템 및 재난대응인프라 구축 · (물류) 산단형 스마트·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| · (교육) 청년 스마트 고급인재 양성 · (일자리) 일자리 창출 강화 · (정주) 문화·생활·복지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|

□ (세부 추진사업)

| | | | |
|---|--|--|--|
| <p>①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</p> | <p>②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</p> | <p>③스마트물류 플랫폼</p> | <p>④통합관제센터</p> |
| <p>· 스마트제조 8대 핵심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모듈형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 검증 및 기업지원</p> | <p>· 제품 개발·제작·성능 검증까지 전공정에 가상 설계 지원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역량 강화 지원</p> | <p>· 노후화된 기존 공동 물류센터에 ICT&AI 기술 적용으로 물류 비용 절감 및 산단 내 유휴 창고 연계·활용</p> | <p>· 산단 내 위험물, 환경 오염, 교통관리를 위해 IOT, 지능형 CCTV,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·활용한 시스템 운영</p> |
| <p>⑤혁신데이터센터</p> | <p>⑥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</p> | <p>⑦소부장 실증화 지원</p> | <p>⑧사업다각화지원</p> |
| <p>· 제조데이터 수집·저장·분석 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공정혁신 지원</p> | <p>· 스마트제조 분야 학부 대학원 과정(재직자 등) 교육환경 조성, 현장 문제해결 중심 커리큘럼 개발 운영, 산학 공동 인력양성 및 기업 애로기술 지원</p> | <p>·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지원센터 구축 및 검사·분석·인증절차 지원</p> | <p>· 사업다각화 플랫폼 구축,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진단분석 컨설팅, 신사업 성장유망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</p> |
| <p>⑨B2B제조거래</p> | <p>⑩스마트에너지 플랫폼</p> | <p>⑪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</p> | |
| <p>· 제조수요-공급기업 매칭지원, 제조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으로 산단 내 B2B 제조거래 활성화</p> | <p>· 산단 통합에너지시스템(EMS)을 구축하여 클라우드 방식의 기업 에너지효율 향상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데이터 축적</p> | <p>· 산단 내 연료전지,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ESS를 확충하고, 전기차 발전 등에 기반한 에너지 거래 네트워크 실증</p> | |

□ (연계사업)

| | |
|---|---|
| <p>①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</p> | <p>②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</p> |
| <p>· 산단 내 온실가스 감축 비규제 대상 중소·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설비 및 서비스 지원으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추진</p> | <p>·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·고도화·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</p> |
| <p>③클린팩토리 보급·확산</p> | <p>④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축</p> |
| <p>· 사업장 생산공정 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(미세먼지, 온실가스, 폐기물, 유해화학물질)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구축</p> | <p>· 산단 내 디자인주도로 자체 제품개발 기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디자인 역량이 취약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을 지원</p> |

- (기본방향) 산업구조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혁신을 선도하는 산업단지로 변모하여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서 지속적 역할을 수행
- (R&BD 네트워크 구축) 산업단지 주력산업 중심으로 유사 기술·업종별 상시 산학연협의체(미니클러스터, MC)를 구성하여 세미나, 교류회, 과제발굴 등 다양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전개
- (현황) 전국 79개의 산학협의체(MC)에 4,504명(기업회원 3,522명)의 회원이 참여, 연평균 4천회 내외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200여건의 공동 R&D 과제 발굴* 및 지원('21.12월말 기준)
 - * (인천) 동반성장 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 뷰티산업 활성화, (경기) 스마트에너지플랫폼 MC 공동 열에너지사업 발굴 등

| | |
|------------|--|
| 단년도 R&D | · 대학, 연구기관 등 기술보유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이전기술사업화 및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한 R&D 지원 |
| 다년도 중형R&D | · 기업간 공정 및 부품 등을 상호 연계하여 공동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모듈 단위의 '프로젝트형 R&D' 지원 |
| 다년도 대형 R&D | · 산단대개조 대상지역에 한하여 산단 혁신계획 등과 연계된 '사전기획-공동R&BD 성과창출' 수립 및 지원 |

* 지원내용 : 단년도(1년, 200만원 이내/연간),
다년도(중형 2년, 400만원 이내/연간, 대형 2년, 800만원 이내/연간)

향후 추진방향

- 공공주도형 MC에서 민간주도형 기업중심 자율형 MC로 전면 전환 추진
- 기존 상향식(Bottom-Up)과 더불어, 17개 시·도 R&D 추진전략을 반영한 하향식(Top-Down) 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R&D 지원방식 다변화
-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을 위한 '스마트 R&D 개편계획' 수립 추진

4

근로자 유인 : 맞춤형 근로자 지원

□ 산업단지 일자리지원센터

- (제도개요) 산업단지의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채용매칭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일자리 지원 체계로,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별 총 26개 지원센터 운영 중
- (주요내용)

| 주요업무 | 주요실적('21년 기준)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·오프라인 채용박람회 개최 ○ 지역별·산업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특화사업* 추진 ○ 산업단지 일자리지원 사례 홍보 및 신규 지원사업 발굴 ○ KICOX JOB(kicox.or.kr/kicoxjob)을 활용한 구인·구직 정보 및 채용매칭 기회 제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용박람회를 통해 4,735명 채용 매칭 ○ 산업단지별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○ 고용유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32명 대상 지원금 지급 |

* 지역맞춤형 일자리 특화사업 현황

| 지역(단지) | 사업 내용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천(남동) | 뉴비즈니스 모델링 사업 |
| 경기(반월·시화) | 경기권 산업단지형 좋은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|
| 경남(창원) | 청년 친화형 스마트 산단 Job-Belt 구축사업 |
| 경남(김해) | 경남 산단 기고만장(기업-고교생 만남의 장) 지원사업 |
| 광주(광주) | 수출주도형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사업 |
| 전북(군산) |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조선 위기 극복 지원사업 |
| 대구(구미) | 우리가 있는 일자리! 상생(자생!상생!) 프로젝트 |
| | 찾아가는 현장면접 PR프로젝트 |
| | 경북청년 일본취업지원사업 |

□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

- (제도개요)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(만 15~34세)를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(월 5만원/버스·지하철·택시·주유 용도로 사용 가능)
- (주요내용)

| 신청요건 | 지원절차 | |
|---|------|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에 해당하며,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 ○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집적법상 입주기업체 ○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(중견기업 제외) ○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~34세일 것 (외국인근로자 제외) ○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| 지원신청 | |
| | ↓ | 지원접수 |
| | ↓ | 지원결정 및 통보 |
| | ↓ | 사용카드 신청 |
| | ↓ | 사용카드 발급 |
| | | |

1 민간중심 역동경제

(규제효과·기업활력 제고)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규제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·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|--|
| 규제혁신 거버넌스 | ▶ 관계부처 장관급 '경제 규제혁신 TF' 신설 |
| 과도한 규제 신설 방지 | ▶ 규제비용감축제(One-In Two-Out) 도입 ▶ 규제일몰제 및 규제영향분석 실효성 제고 |
| 혁신적 규제완화 | ▶ 지방 이전 가능 규제 발굴·이양하고, '규제 원샷해결' 도입 ▶ '상생혁신펀드' 조성 및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신설 |
| 관행적 규제 재정비 | ▶ 시설투자·창업 등 입지 규제 개선 ▶ 기업규모 등에 따른 차별규제 및 경제력집중 감시규제 개선 ▶ '고밀주거지역', '복합용도계획구역' 도입 등 도시 용도지역제 개선 |

(기업투자 확대·일자리 창출) 민간·기업·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되도록 조세·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|---|
| 법인세 등 정비 | ▶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, 최고세율 인하(25→22%) ▶ 유보소득배당 이중과세 조정 확대,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▶ 투자·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폐지 |
| 가업승계 활성화 | ▶ 가업상속공제,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등 합리화 ▶ 납부유예제도 신설 및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 허용 |
| 법적 불확실성 해소 | ▶ 경제형벌규정의 행정제재 전환, 형량 합리화 추진 ▶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정거래법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 |
| 투자·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| ▶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▶ '통합고용세액공제'로 통합 개편하여 지원체계 일원화·확대 |

(중소·벤처기업 육성) 중소·벤처기업이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중소기업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 | ▶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으로 혁신형·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확대 ▶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해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|
|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 | ▶ 혁신창업-스케일업-투자선순환-글로벌 유니콘 육성 단계별 지원 |

(공정한 시장질서 확립) 규제·부담은 완화하되, 불공정 행위는 엄단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|---|
| 불공정행위 엄단 | ▶ 기술탈취,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행위 감시 및 처벌 강화 |
| 공정거래 시스템 마련 | ▶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·추진, 플랫폼 경제 공정거래질서 확립 |

② 체질개선 도약경제

□ (공공·연금개혁) 재정·공공기관·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·효율성 제고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지속가능한 전방위적 재정혁신 추진 | ▶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초 확립 ▶ 20년 이상 재정제도 합리화 및 '(가칭)재정비전 2050' 중장기 전략 수립 |
| 공공기관 혁신 | ▶ 기능·인력 재조정 추진 및 인센티브를 이용한 자발적인 혁신 유도 ▶ 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도입으로 재무건전성 확보 |
| 연금개혁 | ▶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(23.下) 및 공적연금 개혁 추진 + 사적연금 활성화 |

□ (노동시장 개혁) 근로시간·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환경 급변에 탄력 대응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근로시간 제도 개편 | ▶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, 주52시간 틀 속에서 운영방법·이행수단 개선 ▶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(22.下) 및 개정법안 국회 제출 |
| 직무·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·확산 | ▶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여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▶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맞춤형 합리적 임금·평가 체계 도입 지원 |
|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| ▶ 경사노위 내에 논의체계 마련,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추진 |

□ (교육개혁) 현장수요를 반영한 미래 선도 혁신인재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 추진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대학교육 혁신·자율성 강화 | ▶ 첨단분야 정원확대 대책 마련 및 신규 개선과제 발굴(22.下) ▶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및 재정 자율성 강화 |
| 지역·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| ▶ 지방(전문)대,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체계·교육과정 등 개편 ▶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 구축 및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 마련 |

□ (금융혁신) 디지털 혁신·실물경제 역동적 성장 뒷받침, 금융신뢰 제고 등을 위해 금융규제·제도 재정비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디지털 혁신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확대 | ▶ '(가칭)금융규제개혁 TF' 중심으로 금융안정·혁신과제 발굴·추진 ▶ '디지털자산기본법' 제정을 통해 가상시장 시장 성장환경 조성 |
| 자본시장 활성화 외환시장 선진화 | ▶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및 모험자본 활성화 ▶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,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,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 ▶ 해외소재 은행·증권사 등의 국내 외환해장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 |

□ (서비스산업 혁신) 과감한 규제혁신, 서비스업 친화적 지원 강화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|---|
| 규제 합리화 | ▶ '경제규제혁신 TF'를 통해 유망서비스 분야 규제 전수조사·유연화 ▶ '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' 재검토·입법 추진 및 서비스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|
| 제조업-서비스업 차별 해소 | ▶ 세제지원 차별 해소, 신성장서비스업(OTT 등) 세제지원 확대 ▶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,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 개발 ▶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|

③ 미래대비 선도경제

□ (과학기술·R&D 혁신)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개편·지원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|--|
| 과학기술·R&D 정책 수립 | ▶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('22.11月) 및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으로 전략기술 로드맵 마련 ▶ R&D 제도 개편(예타 대상 사업규모 확대 등) 및 평가 시스템 마련 |
| 신기술 기반의 혁신 지원 | ▶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및 초격차 스타트업 1,000 프로젝트 ▶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도입 및 기술개발 실용화 사다리 지원체계 구축 ▶ 중요 분야(6G, 미래차 등) 특허확보 지원, 주요 성과물 국제표준화 추진 |

□ (첨단 전략산업 육성)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기반 조성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신산업 육성 전략 및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| ▶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 및 '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' 수립 ▶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, 인력양성, 산업생태계 공고화 지원 |
|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| ▶ AI, 바이오, 모빌리티·물류, 항공·우주, 로봇 등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▶ 일감 조기창출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 및 원전 수출산업화 지원 ▶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기술 개발 |

□ (인구구조 변화 대응) 장기적 안목에서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고,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대비 확충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범정부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| ▶ '4대 분야 8대 핵심과제' 중심으로 인구위기 대응 * ①경제활동인구 확충(경제활동 참여제고, 인적자본 확충), ②축소사회 대비(학령·병역자원 감소, 지방소멸 대응), ③고령사회 대비(고령층 복지, 돌봄 서비스 확충), ④저출산대응(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, 청년층 맞춤지원) |
| 핵심과제 추진 | ▶ 여성·고령자·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*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,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,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▶ 첨단기술 중심 병력구조 개편, 의료·돌봄·요양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▶ 출산 인센티브 강화(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 등) 및 국가 돌봄책임 강화 |

□ (탄소중립·기후위기 대응)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을 재검토하여 기 발표한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경로·이행수단 검토 | ▶ 부문별·연도별 감축경로를 포함한 NDC 달성방안 마련 ▶ 상향된 NDC 이행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 |
| 저탄소 투자·소비 촉진 | ▶ 탄소중립 투자 유도를 위한 재정·금융지원 강화 ▶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지급대상 활동 확대 |
| 순환경제·ESG 생태계 조성 | ▶ 폐플라스틱, 폐배터리 재활용 등 순환경제 기반 구축 ▶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 |

4 함께가는 행복경제

□ (사회안전망 강화)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보장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|--|
| 사회안전망 보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기초 생활보장 보장성 강화 및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▶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다양화,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도입 추진 ▶ 고용보험을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 추진 |
| 맞춤형 지원 확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초연금 인상(월30→40만원),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▶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 ▶ 국가유공자 소득·의료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적극 보완 ▶ 아동학대 예방 및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전방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|
| 주거복지 지원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주거복지 혁신방안' 마련(~'22.下) ▶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('23~'27) |

□ (근로 유인 및 기회 확대) 근로 유인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 보장·청년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|--|
| 근로 유인 인센티브 확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요건완화·지급액 인상 ▶ 구직촉진수당, 취업성공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|
|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 지원대상 확대 ▶ 구직자·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로 맞춤형 서비스 강화 |
| 청년 기회 제공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공정채용법' 입법으로 불공정 채용 시정 ▶ 청년 원가주택 등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▶ 취약청년 실태조사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'청년도약준비금' 등 검토 |

□ (복지시스템 고도화) 복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선제적으로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확대 ▶ 사회보장제도 전수 DB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사업 체계적 관리 |
| 민간 참여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규모화·다변화 지원 |
|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고용 :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▶ 교육·훈련 : 부처별 사업간 전달체계 정비 및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 ▶ 간호간병 : 급성기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|

□ (지역균형 발전) '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' 실현

| 구분 | 세부 과제 |
|-------------|--|
| 지방 경쟁력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적극 지원 ▶ 신규 국가산단 조성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강소도시 육성 |
| 자생적 균형발전 도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▶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확충 및 낙후지역 지원 강화 |
| 지방소멸위기 대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인구감소지역에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·문화 등 지원 ▶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,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 추진 |

작 성 자

- 투자종합상담실 한국산업단지공단 과견관 조정현

KOTRA자료 22-085

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산업입지 관련 추진내용

| | | |
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행인 | | 유정열 |
| 발행처 | | KOTRA |
| 발행일 | | 2022년 7월 |
| 주소 |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(06792) |
| 전화 | | 02-1600-7119(대표) |
| 홈페이지 | | www.kotra.or.kr |
| 문의처 | | 투자종합상담실 (02-3497-1956) |
| I S B N | | 979-11-402-0352-9 (95320) |



Copyright © 2022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